

2020년 06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60

AURI POLICY UPDATES

건축·도시 분야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동향

건축도시정책동향

2020년 06 (Vol.60)

발행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발행인	박소현
발행일	2020년 7월 1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조상규, 송유미, 주찬영
주소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연락처	044-417-9845
이메일	ymso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행안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 도시숲법 제정·공포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

6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 착수
인천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경기도,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강원도,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착수
전북도,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착수
세종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12

국토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4개 교육기관 선정
국토부, 유희부지 활용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 공급 추진
문체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후보지 3곳 선정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내 규제샌드박스 신규 사업공모 시행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단지 조성 추진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충남도,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사업 본격 추진 선언
전남도, 내년 '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7곳 선정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동향 17

행복청, 미세먼지 저감 '도시조성 가이드라인' 도출
국토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국토부·여가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건축·도시 분야 Updates

2020년 06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행안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생활공간정책과, 2020.06.09.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정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 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건설공급과, 2020.06.11.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편리하게 설치·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내용은 ①입주자등의 동의요건 완화, ②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등의 용도변경 허용·확대, ③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규제 정비 등 이다.

산림청, 도시숲법 제정·공포

도시숲경관과, 2020.06.12.

완료

국토
정책

환경

산림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도시숲법)이 6월 9일 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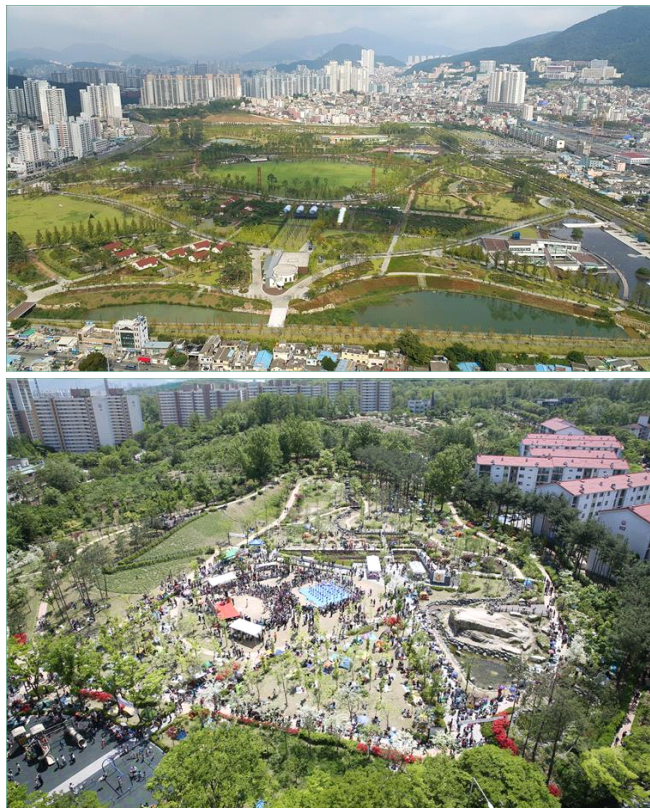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조성·관리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도시환경 문제의 친자연적 해결을 위해 2019년부터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발생원과 주거지역 사이에 조성하여 미세먼지의 생활권 유입을 차단하는 숲

** 대기순환을 유도하여 도시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내부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기능

현재 17개 도시에 설계 중으로, 총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하여 2022년까지 조성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주택정비과, 2020.06.16.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개발 사업 시의 임대주택 건설비용 상한선을 상향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적기에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용」 개정안도 2020년 7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한선 상향, ② 상업지역의 임대주택 공급 등이다.

[제도개선에 따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변화]

구분		현행	개정
법률		전체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좌동)
시행령	임대 비율	전체 세대 수의 15% 이내	전체 세대 수의 20% 이내
	상업 지역	상업지역은 임대건설 의무 제외	상업지역도 임대건설 필요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고시	일반 지역	(서울)세대 수의 10~15% (경기·인천)세대 수의 5~15% (기타)세대 수의 5~12%	(서울)세대 수의 10~20% (경기·인천)세대 수의 5~20% (기타)세대 수의 5~12%
	상업 지역	없음	(서울)세대 수의 5~20% (경기·인천)세대 수의 2.5~20% (기타)세대 수의 0~12%
	추가 사유·범위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5% 범위 내 추가	구역내 세입자 많은 경우 또는 주택수급안정 필요 시 10% 범위 내추가

서울시, 국내 최초 '설계의도 구현제도' 전면 시행

도시공간개선반, 2020.06.16.



건축
정책

서울시가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건축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

유명무실했던 설계자의 설계 후 공사과정 참여를 '설계의도 구현'을 위한 정식업무로 제도화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현재 공사 중인 건축물을 포함해 앞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전면 적용한다.

설계자는 자신이 설계한 건축물의 실제 시공과정에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변수로 인해 설계안과 달리 시공되는 일을 막고, 공사 담당자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불필요한 설계변경 예방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계의도 구현제도」는 ①적정한 대가기준 마련, ②합리적 업무범위 마련, ③설계자의 참여보장 세 가지로 추진된다.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국토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부동산개발정책과, 2020.06.15.



국토교통부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공공토지비축 제도: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

2009년 토지비축 제도 첫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토지 비축 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토지비축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

	내용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함께 사는 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사회·경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비축제도’를 목표 •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방쇠퇴 및 지역불균형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반영
토지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2029년 SOC 등 6개 부문 총 402.8㎢(연 40.3㎢) * 공공택지 104.6㎢, 산업용지 135.6㎢, 도로 92.8㎢, 철도 55.1㎢, 항만 등 14.6㎢
비축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 지원 등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를 비축 • 수용권이 없는 공공사업용 토지도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대상에 추가 * 도시재생 등 사업계획 수립 된 토지 대상(협의취득 후 공공개발용 토지가격으로 공급)
비축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를 법상 토지 취득목적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수급조절용 토지’로 구분하고,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운용
비축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 공사채 발행으로 조달, 토지은행적립금 활용방안 검토 * '20.5월 현재 토지은행적립금 5조 552억원 적립

국토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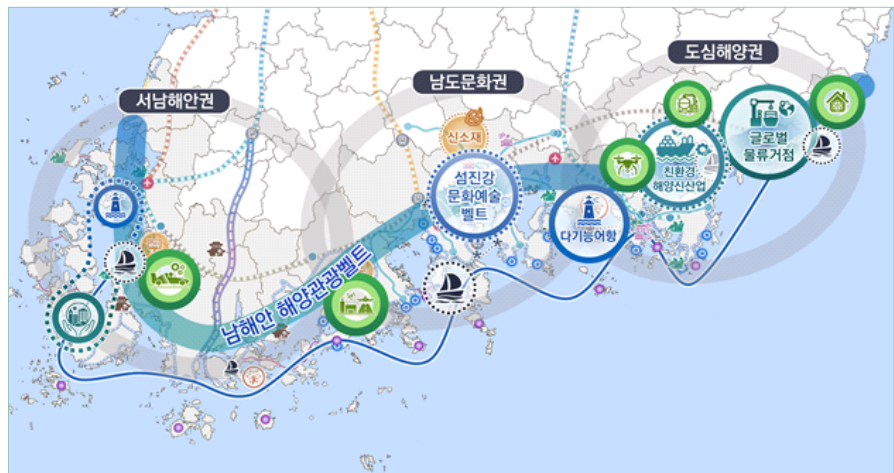
기획총괄과, 2020.06.30.



국토교통부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 하였고, 지역발전의 통합적·협력적 관점을 중시하여 지역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종합계획의 비전을 ‘상생과 번영의 남해안 공동체’로 설정 하고, ①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②새로운 국토성장축 형성, ③2시간대 통합 생활권 달성의 3대목표와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간구상도]

대구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 계획 수립 착수

도시정비과, 2020.06.17.



대구시는 10년 후 대구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 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

이번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종합 계획으로써,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인천시,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스마트도시담당관, 2020.06.24.



인천시는 글로벌 기후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자원/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ICT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중장기 계획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은 『행복한 시민, 살기 좋은 도시 스마트 인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5대 목표와 10개 추진전략 아래 지역별 특성과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28개의 스마트 도시서비스를 선정하였다.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대전시,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확정 고시

도시정비과, 2020.06.29.

완료

도시
정책

대전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30 대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였으며, 7월 1일부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시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20 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에서 진행 중인 구역은 기정 기본계획 기초를 유지했다. 주민동의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지의 정비, 보전, 관리방향 등을 포함하는 주거생활권 계획을 도입해 주거지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했다.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 활력도시 "대전"					
목표	 대전시 주거정비 정책 패러다임 전환	 역세권 중심의 토지이용 효율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도모	 동네, 마을 등 지역공동체의 회복	 공공의 역할 강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지 종합관리체계로의 전환 • 도시외연 확산 방지 및 원도심 활성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특성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이 아우러지는 도시정비 •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면서 도심 고밀·압축 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위주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거유형이 혼합될 수 있는 토대 마련 • 1~2인 및 청년 등 가구 수요를 위한 다양한 유형 주택 건설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생활권 계획의 도입으로 통합적 도시정비 도모 • 사회적 약자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주도에서 벗어나 민 + 관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도시정비

[정책목표 및 전략]

경기도,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 승인

도시정책과, 2020.06.04.

완료

도시
정책

경기도가 성남시가 신청한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은 성남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 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

도는 이번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 승인으로 경제자족도시 구축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성남이 수도권 남부 광역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강원도, 제2차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착수

건축과, 2020.06.25.



강원도는 “제2차 강원도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강원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은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과 2014년 제정된 도 건축기본조례 규정에 의한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도 현황과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기본계획안은 공청회와 도의회 의견청취 및 강원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5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착수

주택건축과, 2020.06.16.



전북도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2030 전라북도 주거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함에 따라,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주택정책도 행복주택·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으로 개편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에서는 인구·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각종 주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기적인 주거정책 목표 및 단계적 실행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도 주거종합계획에 담길 주요 내용은 새로운 주거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 시대변화를 감안한 균형 잡힌 주택 공급방안, 시·군별 주거실태 등을 고려한 추진과제,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강화과제, 주거환경 개선 및 빈집 관리방안, 기타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세종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 착수

도시정책과, 2020.06.02.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도시 공간과 도시민 삶이 급변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이슈를 반영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나선다.

시는 향후 도시계획 이슈로 비대면 접촉 수요 증가, 야외 여가활동 증가, 밀집거주공간 해소, 자전거 활용 증가, 디지털인프라 확충 등이 부각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신도시와 읍면지역이 상호 보완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뤘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 행복청, LH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 초기단계부터 마지막까지 계획수립 전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국토부,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 10개 팀 선정

도시재생영량과, 2020.06.02.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사업의 공모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역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주민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지역 활성화 사업*을 기획하면, 정부가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업실현을 위한 운영비와 초기사업비 일부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예시)노인돌봄 등 커뮤니티 서비스, 지역특산물 제작·판매,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수익창출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 공동체육성 등

국토부는 2차 공모를 통해 10개 내외의 팀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10개 팀은 6월 4일부터 3개월간 전문가 컨설팅을 받으며 공모에 제출한 사업을 보다 발전시킬 기회를 갖게 되고, 사업기획 등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5백만 원)도 지원받게 된다.

분야	지역	팀명	사업내용
사업 창업	서울 양천구	양천해울	경력단절 여성들이 강사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내 교육·문화 프로그램 보급
	강원 횡성군	청년비상	농촌 일손을 돕고 농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방제 사업 실현
	경남 함안시	함안통!	지역 특산품인 파프리카를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축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브랜드 개발
	충남 서천군	더블 트라이앵글	주민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골목 상권 활성화
공동체 육성	서울 강서구	송정리 주(酒)인들	지역재배 쌀을 활용한 전통주 사업화로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의 수익창출
	강원 동해시	봉정연꽃 마을주민	연꽃 등 마을 농산물자원을 활용한 음식개발 및 마을 공동 식당운영으로 공동체 활성화
	강원 횡성군	구리고개	주민협의체 구성 및 하단 및 담장 정비, 골목 청소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북 봉화군	아기사슴 별별이야기	천문관측 자료를 활용한 볼거리와 별자리 체험행사, 먹거리 개발 등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경북 문경시	문경청년 연합	지역 소규모 농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을 통해 생산품 품질 향상 및 판매망 확대로 수익증대
	전남 구례군	좋은 도서관모임	작은도서관을 거점으로 하는 생활문화 공동체 육성 및 지역문화 활성화

국토부,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 전담 4개 교육기관 선정

건축문화경관과, 2020.06.03.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와 산업화를 위한 2020년도 「한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4개의 교육기관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교육기관은 한옥설계과정에 3개 기관,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에 1개 기관이며, 7월부터 한옥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한옥설계 전문과정은 현장 실무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입문과정 외에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한옥시공 관리자과정은 공정관리와 같은 현장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재수량 산출, 발주 등 시공현장의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한옥 연구과제 사업으로 개발된 신기술과 한옥설계자동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전통과 현대기술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신기술 확산 보급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 유희부지 활용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 공급 추진

물류정책과, 2020.06.16.



앞으로 공공기관 보유 유희부지를 활용한 공유형 집배송센터* 등 도심 내 생활물류시설 설치 공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 소형화물 집배송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중소 물류업체 등이 공동으로 활용, 도심 내 인근지역 배송업무를 위한 소규모 거점 기능 수행

그동안 택배업계 등은 소비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심지 인근에 집·배송센터 등 생활물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를 희망하여 왔으나, 신규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유희공간 활용 생활물류시설 확대 회의’를 개최하고, 협의체를 통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희 부지 및 공간을 생활물류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후보지 3곳 선정

관광정책과, 2020.06.23.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속초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광역시 중구 총 3곳을 선정했다.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은 면적 약 4km²이하 구역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력을 관광서비스에 접목시켜 신속·편리하고 최적화된 관광서비스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기존 관광산업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5세대(5G) 이동통신 등

이후 3곳을 대상으로 구체화된 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9월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국가 시범도시 내 규제샌드박스 신규 사업공모 시행

도시경제과, 2020.06.25.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부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 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를 유예하여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공모		자유공모
세종	부산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건강토큰 서비스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AI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도시 범죄예방 및 긴급대처 서비스	에너지 자립도시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공공 로봇서비스	

인천시, 청라국제도시에 영상·문화단지 조성 추진

서비스산업유치과, 2020.06.10.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스트리밍 시티 등 3자간 청라에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단지와 관련 산업 클러스터인 ‘스트리밍 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스트리밍시티는 ‘영상·문화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쏟아져 내리는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라 투자유치 용지에 MBC아트 등을 앵커로 해 영화·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미디어 센터, 세계문화거리 및 업무 시설 등을 만들 계획이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상·문화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영상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한편, 청라국제도시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광주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

투자유치과, 2020.06.03.



광주광역시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광주경제자유구역이 3일 최종 지정돼 광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에 일대 전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따라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에너지밸리, 첨단3지구를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의 혁신성장이 가능한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AI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신청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

구분	산단
미래형자동차 산업지구	빛그린국가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	에너지밸리일반산단
스마트에너지 산업지구 II	도첨국가산단
AI 융복합지구	첨단3지구

광주경제자유구역은 ‘상생과 인공지능 기반 융복합 신산업 허브’를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광주형 일자리’와 ‘AI’를 기반으로 광주의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를 재편함으로써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충남도, '충남형 그린뉴딜' 50개 사업 본격 추진 선언

기후환경정책과, 2020.06.05.



도시
정책



충남도가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안팎에 선언했다. 앞으로 5년 동안 2조 6472억 원을 투입해 4대 분야, 10개 과제, 50개 사업을 추진, 일자리 5만 6424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방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탄소 중립사회로 전환’으로, 목표는 ‘지구는 살리고 일자리는 늘리기 위한 충남형 그린뉴딜’로 설정했다. 4대 분야는 ① 기후위기 대응 및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② 녹색 제도와 생활환경, ③ 그린 SOC, ④ 거버넌스형 일자리 등이다.

도는 이번 충남형 그린뉴딜 사업을 단기·중기, 자체·보조 추진·건의 과제 등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남도, 내년 ‘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 7곳 선정

해운항만과, 2020.06.05.



국토
정책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의 내년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에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소와 역량강화사업 4개소 등 총 7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권역단위 거점개발로 추진될 어촌종합개발사업 3개소는 고흥군 남양 권역과 완도군 고금권역, 신안군 화도권역 등이다. 3개 권역에는 오는 2025년까지 186억 원이 투입돼 어촌의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통합 개발해 지역단위 생활경제권을 형성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은 교육문화복지 등 기초생활 기반 확충과 특산물 유통가공 시설 등 소득증대 지원, 테마체험마을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육성 등이다.

또 지역 역량강화사업으로는 보성, 장흥, 해남, 신안군 등 4개 지역이 선정돼 마을리더 교육과 어촌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국토부,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 발표

건설안전과, 2020.06.18.



정부는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법무부, 소방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16년, '19년 범정부 화재대책(완공된 건축물 대상)과는 달리 시공중에 있는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대책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번 「건설현장 화재안전 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비용 절감보다는 근로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둘째, 건설공사의 단계별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셋째, 안전 관련 규정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여가부,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도시경제과, 2020.06.23.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귀갓길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불안에 떨게 하는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의 호신용 어플리케이션인 여성안심앱을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를 중심으로 CCTV와 여성안심앱, 112·119 상황실을 상호 연계하여, 위급상황 발생시 여성안심앱을 통해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여성 주변의 CCTV 영상정보를 경찰 등에 즉시 제공하여 여성대상 범죄를 실시간 강력 대처한다는 것이다.

* 지자체가 방범·교통·시설물 관리 등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수의 정보시스템(CCTV 등)을 연계·운영하는 통합운영센터

오는 11월부터 서울특별시, 안양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 하반기 중 여성안심앱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추진

공간정보제도과, 2020.0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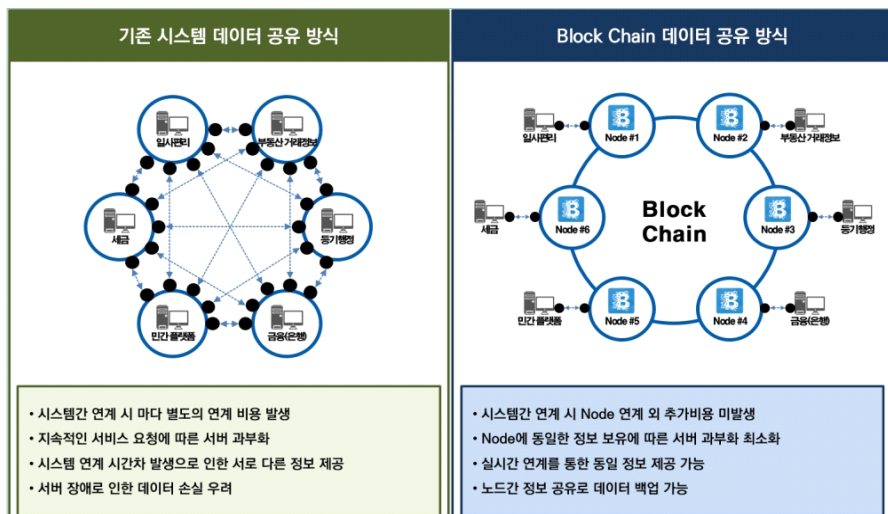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 토지(임야)대장, 건축물 정보, 토지이용계획,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국토교통부는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여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존에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 받아 확인·제출하던 방식을 실시간성, 투명성, 보완성이 뛰어난 블록체인 기술 기반 데이터 형식으로 전환하여 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게 하여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 등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거쳐 실시간 데이터 공유 방안을 정보화전략 계획에 담는다는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건축·도시 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발효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03]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701, 194, Jeoljaero-ro, Sejong-si, 30103, Korea

